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12면	명륜고총동문회 하계 야유회	1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명륜고 총동문회 하계 야유회	1
江原日報	01면	“강원남부 가는 길 빨라집니다”	1
江原日報	01면	서울~태백 2시간대 준고속열차 'itx-마음' 명명	2
강원도민일보	01면	ITX-마음 마중물 폐광지 교통망 확충 목소리 고조	2
강원도민일보	03면	폐광지역 '마음'놓고 환호… 속도 못 내는 노선 개선 과제	3
강원도민일보	02면	지광국사탑 환지본처 축하연	3
강원도민일보	15면	평창읍주민자치회 총회 열고 사업의제 선정	4
江原日報	16면	화천군 하남면번영회 화합행사	4
강원도민일보	22면	춘천 도의원 야간 순찰	4
江原日報	온라인	더불어민주당 고성군당원협의회 발대	5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화천군수기 민관군축구대회	6
강원도민일보	20면	특자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 개막	7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지방소멸대응기금 상위 등급 확보를 위한 제언	7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박영록 홍천군의장·김영숙 횡성군의장·엄윤순 도의...	8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8
江原日報	21면	[동정]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고성·사진 왼쪽)·엄...	8
江原日報	04면	“강원 수도요금 ㎡당 983.5원 서울 523.9원보다 46.7% 비...	9
江原日報	05면	"日 오염수 불안" 동해안 횃집 예약 취소 속출	10
江原日報	05면	폐장 해수욕장·계곡서 수난사고 잇따라	10
강원도민일보	04면	도내 14개 시·군 분만 취약지… 10개 지역 산후조리원 전무	11
강원도민일보	02면	"개발진흥지구 해제돼도 기존 지구단위계획 규제 유지"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교육공무직 정원 초과 페널티 신중을	12
江原日報	19면	[사설] 올 하반기·내년 경제 불투명, 이대로 관찮은가	13
江原日報	19면	[사설] 산업단지 규제 혁파,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돼야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할 때 아니다	15

江原日報

2023 08 28 ()
12

명륜고총동문회 하계 야유회 강릉명륜고총동문회(회장: 이수하) 하계 야유회가 지난 26일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246 카페 일원에서 권성동·노용호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자치도지사, 김광래 강원도립대 총장, 김홍규 강릉시장, 김기영 시의장 등 동문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8 ()
11

강릉명륜고 총동문회 하계 야유회 강릉명륜고총동문회 2023하계야유회가 지난 26일 성산면 어흘리 일원에서 권성동·노용호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도지사, 김기영 강릉시의장, 박원재 울곡연구원장, 이수하 강릉명륜고총동문회장을 비롯한 기수별 회장, 선·후배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8 28 ()
01

“강원남부 가는 길 빨라집니다” 지난 25일 태백역에서 열린 차세대 친환경 신형열차 ‘itx-마음’ 개통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 권혁열 도지사,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시승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백=전명록기자

2023 08 28 ()
01

江原日報

서울~태백 2시간대 준고속열차 'itx-마음' 명명

태백선 'EMU-150' 시승행사 성료 ... 9월1일부터 운행

태백선에 달리는 준고속열차 EMU-150의 이름이 'itx-마음'으로 명명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5일 태백역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지역 사회단체 회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신형열차 EMU-150의 명명식 및 시승행사를 열었다.

원희룡 장관은 "9월1일부터 itx-

마음이 운행을 시작한다"며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잇는 의미로 앞으로 강원도가 전국의 팔도와 남북을 잇고 우리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중심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마음'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천~삼척 철도가 5차 철도망 계획에 담기고 동서고속도로 영월~삼척 구간 사업도 앞당길 수 있도록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 김진태 도지사와 힘을 합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들은 "itx-마음을 통해 주민의 이동편의성이

높아지면 관광 수요도 증대되고 기업들의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석탄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강원 남부와 석탄지대의 희생에 대한 첫 보상이 itx-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도를 비롯해 5개 지자체가 분담금 등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다"며 "철도 노선 개량사업 전에도 시간표 편성, 정차역 조정 등 시간 단축을 위해 한국철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태백선 준고속열차 조기 도입에 따른 열차 운행 업무협약을 했다.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2023 08 28 ()
01

강원도민일보

ITX-마음 마중물 폐광지 교통망 확충 목소리 고조

청량리~동해 준고속열차 운행

최근 태백역서 개통 기념식

영월~삼척 고속도 동서6축

양구~정선 남북9축 완성 총력

수도권과 폐광지역을 잇는 준고속열차인 'ITX마음' 운행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폐광지역의 기간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결과 오는 9월 1일 서울 청량리~영월~정선 사북 민둥산, 태백, 삼척 도계, 동해 (290.8km)를 운행하는 시속 150km의 준고속열차인 'ITX마음'이 개통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5일 태백역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이상호 태백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등 5개 시·군 단 체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신형열차 EMU-150개통기념식'을 개최했다.

열차 이름은 'ITX마음'으로, 9월 1일부터 하루 2회 운행한다. ITX마음은 최고 시속 150km 기준 청량리~영월이 1시간 26분, 사북역이 2시간 11분, 태백역이 2시간 36분 각각 소요되는 등 기존보다 1시간 가량 줄어

든다. 다만, 노선 노후화와 신형 열차 신뢰성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최대 시속 운행은 불가하다. 이에 따라 청량리역부터 영월역까지 1시간 58분, 태백역은 3시간 5분, 동해역은 4시간 12분 이 각각 소요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충북 제천에서 열차가 들어온 것은 1950년대 시작됐다"며 "노선 개량을 통해 소요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철규 의원은 "차세대 열차 ITX마음의 개통은 강원남부 권의 제도약"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막장 속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희생의 보상이 ITX마음"이라고 말했다.

폐광지역 교통망 개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영월~삼척 동서고속도로가 2024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2034년 평택~삼척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해져 동서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 또, 양구~정선~경북 영천을 잇는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도 속도를 내고 있다.

'ITX마음' 개통기념식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월~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동서고속도로 6축이 영월과 삼척 구간인데, 정치권과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타면제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재부가 예산을 주면 국토부는 빨리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3·15면



태백선 준고속열차 EMU-150 명명식 및 개통기념식이 지난 25일 태백역에서 열린 가운데 폐광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우열

2023 08 28 ()
03

강원도민일보

폐광지역 '마음' 놓고 환호... 속도 못 내는 노선 개선 과제

ITX마음 개통기념식

주민들 내달 1일 개통 기대감
철로 노후화 최고 속도 불가
직선화·선형개량 등 시급

'ITX마음'의 개통을 앞두고 주민들의 지역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준고속철도의 속도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노선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시속 150km의 준고속열차인 ITX마음 개통기념식이 지난 25일 태백역에서 열린 가운데, 오는 9월 1일부터 서울 청량리~영월~정선 사북 민둥산, 태백, 삼척 도계, 동해(290.8km) 구간에 ITX마음이 하루 2회 운행되면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ITX마음 개통기념식에 참석한 김주영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장은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태백선에 시속 150km의 준고속열차 시대가 열려



태백선 준고속열차 'ITX마음' 개통기념식이 지난 25일 태백역에서 열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등이 시승을 하고 있다. 김우열

감격스럽다"며 "태백 등 강원남부권의 경제재도약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접근성 개선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성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속교통망 확충을 통해 떠나는 태백이 아닌 찾아오는 태백을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주민, 기관·단체장 등은 철도의 최대 장점인 속도를 100% 살리지

못한 게 것을 가장 큰 아쉬운 점으로 꼽고 있다.

최고 시속 150km 기준으로는 태백~청량리 운행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가량 줄지만, 노선 노후화로 최고 속도를 달리지 못해 20~30분 가량 줄어드는 데 그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속 150km로 운행하기 위한 직선화와 선형개량 등 노선 개선이 시급히 풀어야 할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속도에 대해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철도 노선 개량사업이 되면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재창 태백시의장은 "철로 노후로 인해 시간 단축 등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당초보다 5년 앞당겨 개통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선 개량과 직선화에 역량을 쏟아부으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강원도민일보

2023 08 28 ()
02

지광국사탑 한지분처 축하연 지광국사탑 한지분처 축하연이 최근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 원강수 시장, 이재용 시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이종훈 문화재청 보존국장, 박순조 전시 문화재환수위원장, 적천 구룡사 주지, 송치호 부른면 이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제공=원주시

▶ 관련기사 4면

강원도민일보

2023 08 28 ()
15

평창읍주민자치회가 주최한 제3회 평창읍 주민총회 및 주민소통 한마당이 최근 평창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창읍주민자치회 총회 열고 사업의제 선정

평창읍주민자치회(회장 김성원)가 주최한 제3회 평창읍 주민총회 및 주민소통 한마당이 지난 25일 평창문화복지센터에서 심재국 군수, 지광천도의원, 이창열·이은미·박춘희 군의원과 지역의 각급 기관 단체장,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올해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6가지 의제에 대한 사전 주민투표에 이어 선정된 사업들에 대한 제안발표와 현장투표를 실시, 내년에 추진할 의제사업을 선정했다. 총회 결과 내년도 주민자치회 의제사업으로 별밤 야시장, 평창읍 어린이를 위한 반짝 물놀이, 빛나는나의대문-취약계층 가정조명 달아드리기, 2024 평창읍 주민소통 한마당 등을 확정했다.

신현태

江原日報

2023 08 28 ()
16

화천군 하남면변영회 화합행사 제1회 화천군 하남면변영회(회장: 오경택) 화합행사가 지난 26일 원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신준현 군산림조합장, 송호관 군체육회장, 이덕재 강원다누리신탁 이사장 등 변영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8 ()
22

춘천 도의원 야간 순찰 묻지마범죄 예방을 위해 춘천지역 박기영, 박찬흥, 박관희, 양숙희, 임미선, 이무철 강원도의원과 해병대춘천전우회회원들은 지난 25일 합동야간방범 순찰 봉사활동을 벌였다.

2023 08 27 ()

江原日報

더불어민주당 고성군당원협의회 발대

지난 26일 고성문화원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위원장:박상진) 고성군당원협의회 발대식이 지난 26일 고성문화원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고성군당원협의회 발대식이 지난 26일 고성문화원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박상진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 함명준 고성군수, 이지영 도의원, 함형진 군의원,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윤장원 원로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깃발 수여식,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규탄결의 대회 등이 진행됐다. 고성군 당원협의회 발대식은 속초·인제·고성·양양 4개 시군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려 지역위는 이를 기점으로 4개 시·군에 모두 지역조직체를 꾸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지역위원회(위원장:박상진) 고성군당원협의회 발대식이 지난 26일 고성문화원에서 열렸다.

박상진 지역위원장은 “고성 당협의 역사적인 출발은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간절함의 결과”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정운영을 국민주권, 민생우선, 국익실용외교로 전면 정상화하는데, 고성 당협과 설악권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동해고속도로 고성구간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여 반드시 개설되어야 하는 과제, 화진포 등 여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힘을 합하자”며 “고성 발전을 위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군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23 08 27 ()

강원도민일보

화천군수기 민·군·관 축구대회

안의호



▲ ‘제22회 화천군수기 민·군·관 축구대회’가 지난 26일 하남면 위라리 생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엽 군의장, 송호관 군체육회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동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제22회 화천군수기 민·군·관 축구대회’가 지난 26일 하남면 위라리 생활체육공원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엽 군의장, 송호관 군체육회장, 박대현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동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unsol@kado.net

2023 08 28 ()

20

강원도민일보



특자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 개막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 개막식이 지난 25일 홍천군야구장에서 오홍수 홍천군 부군수, 박영록 군의장, 최이경 부의장, 홍성기 도의원, 용준식 군의원, 김윤호 도체육회 부회장, 신은섭 군체육회장, 김길수 도야구소프트볼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8 ()

19

지방소멸대응기금 상위 등급 확보를 위한 제언

의정칼럼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의 인구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의 '기초지원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도내 16개 시·군의 성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해 운용에 들어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同)법 시행령이다.

재원은 회계연도마다 정부출연금 1조원과 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7500억 원을, 금년도를 포함한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1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서를 제출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과 인구관심지역 4개 시·군이 그 대상이었다. 이는 전국의 인구감소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의

1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출된 투자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평가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별 기금 배분 금액의 차등 지원을 위한 기초 평가 자료로 활용됐다. 등급별로는 A·B·C·D·E로 나뉘어 지원됐으며, 그 비율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공히 A 5%, B 15%, C 20%, D 35%, E 25%로 결정됐다.

인구감소지역 A등급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만 도합 210억원, B등급 168억원, C등급 140억원, D등급 126억원, E등급 112억원씩 지원됐다. 인구관심지역 또한 A 53억원, B 42억원, C 35억원, D 32억원, E 28억원으로 등급별 차등 교부됐다.

행안부의 기금 투자계획서 평가 결과, 도내 16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공히 A등급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인구감소지역에서 평창과 정선이, 인구관심지역에서는 속초와 인제, 모두 4개 시·군이 B등급에 그쳤으며, C등급 11곳, 심지어 E등급도 1곳으로 집계됐다.

A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위 5%에 들어야 하고, 이를 감안할 때 전국의 107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상위 5.35위 이내에 포함된다. 이는 행정안전부 제출 기금 투자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부실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우수성

을 비롯한 △계획의 연계성 △추진 체계의 적정성 등 주요 평가항목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계상 문 제점으로는 10년 한시사업이라는 점과 기금을 받게 되면 지자체의 기준수입액이 늘어나면서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풀어야 할 대표적인 숙제로 진단된다.

그럼에도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최근 지속적인 국제 수입 감소 등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감액 교부가 현실화되면서 지출사업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긴요한 재정적 활용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상위 등급 확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의 일선 시·군별 컨설팅을 한층 강화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기금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향후 행안부로부터 A등급 등 상위 등급을 받는 시·군에게는 회계연도별 도비 교부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유인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시기적절한 대응을 다시 한번 주문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8 ()

14



장·홍성기 도의원은
28일 오후 6시 원주시
댄싱공연장 주차장 일
원에서 열리는 한국후
계농업경영인 강원특
별자치도대회 개최식
에 참석한다.



박영록(위 왼쪽) 홍천
군의장·김영숙(위 오
른쪽) 횡성군의장·엄
윤순(아래 왼쪽) 도의
회 농림수산물위원회

江原日報

2023 08 28 ()

21

후계농업경영인 도대회



◇김용복도의회농림수산물
위원장(고성·사진 왼쪽)·엄윤순
농림수산물위원회부위원장(인
제)은 28일 오후 7시 원주 댄싱
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
원에서 열리는 제17회 한국후
계농업경영인 도대회 개최식
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8 28 ()

11



박호균 도
의원은 28
일 오후 6
시 원주시
댄싱 공연
장 주차장 일원에서 열
리는 한국후계농업경
영인강원특자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강원 수도요금 m³당 983.5원 서울 523.9원보다 46.7% 비싸”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36차 월례회가 지난 25일 횡성군의 회 회의실에서 열려 현안을 논의했다.

도시군의장協 횡성서 월례회

지역 격차 해소 대정부 건의
오페라 하우스 건립 촉구도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김일용)가 지난 25일 횡성군의회의에서 제236차 월례회를 열고 ‘지역 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 촉구 건의문’과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환경부의 2021년 상수도 통계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m³당 평균단가는 720.8원이며 서울이 523.9원으로 최저, 강원특별자치도가 983.5원으로 최고로,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서울 시민보다 46.7% 비싼 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도사업 경영원칙에 수도요금 지역 격차 해소 의무를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지역 간 불균형의 근원이 되는 수도설치 비용 및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

지원, 대체 불가능한 필수 공공재인 수돗물을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동일한 가격에 공급받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2019년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가 협약을 맺고 옛 종축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진호 춘천시의회장, 이재용 원주시의회장, 김기영 강릉시의회장, 이동호 동해시의회장, 정정순 삼척시의회장, 박영록 홍천군의장, 김영숙 횡성군의장, 심재섭 영월군의장, 심현정 평창군의장, 전영기 정선군의장, 박기준 철원군의장, 노이업 화천군의장, 이춘만 인제군의장, 오세만 양양군의장 등 15개 시·군의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에서는 박광수 양양군의원에게 강원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여했다.

유학렬기자 hyyoo@kwnews.co.kr

江原日報

“日 오염수 불안” 동해안 횡집 예약 취소 속출

방류 첫 주말... 얼어붙은 상권

유동인구 줄고 단체예약 ‘뚝’
상인들 방사능 측정기 도입도
어민들 수산물 가격 하락 우려
“집단행동 불사” 대책 촉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인 27일 강원 안목해변의 A횡집. 단체석 위주로 영업을 하는 이곳은 이번 주말 사이 6개팀이 예약을 취소했다. 상권, 화식집 등이었다. 업체 대표는 “하나 같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불안하다’며 취소했다. 이렇게 빨리 영향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방문객 수 감소 곳곳에서 현실
화=강원지역 동해안 수산업계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경제적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25일 “첫 방류 이후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아직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도내 주요 횡집 상권들은 유동인구 감소를 겪었다. 고성 봉포항할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틀날인 지난 25일 양양군 현남면 남해항 내 수협 위판장에서 수산물 가격 하락 우려 속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화센터는 주말 저녁이면 꽉 차는 주차장이 이번 주말에는 절반 정도가 비었다. 배오복 봉포어촌계장은 “방문객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속초 대포항의 상인들도 “막바지 피서철인데도 예년에 비해 유동인구가 30% 감소했다”며 “손님들이 일본산 가리비를 아예 찾지도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9월 가을철 단체 관광객 예약도 뚝

끊겼다. 대형 횡집을 운영하는 박성균 경포 해안상가 상인회 부회장은 “지난해 이맘때에는 50~100명 규모 단체 예약이 6건가량은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전무하다”며 “젊은 상인들은 횡집 대신 커피점으로 전환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위축했다”고 말했다.

■상인들 “앞으로가 더 걱정”=자구책을 마련한 업소도 있었다. 속초시 조양동의 명소인 A물회집은 이번 주말부터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3대를 갖춰 놓았다. 손님들이 원할 경우 직접 측정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 발표에도 불안해하는 손님들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동인구가 몰린 수산시장도 있었지만 상인들이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손님들이 “오염수가 더 퍼지기 전에 회를 싣것 먹으러 왔다”거나 “앞으로 장사를 하실 수 있겠느냐”며 걱정하는 말을 심심찮게 들었기 때문이다.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어민들의 근심도 커졌다.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유통비와 선원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줄어하면 적자’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전세완 속초시 지방합회장은 “어민 보호 대책을 찾아볼 수 없어 답답하다. 상황이 지속되면 집단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신하림·권원근·최영재기자

江原日報

폐장 해수욕장·계곡서 수난사고 잇따라

삼척 오십천 30대 물에 빠져 숨져
고성 송지호해수욕장 1명 심정지

막바지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이 몰린 주말과 휴일 동안 강원지역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6일 낮 12시45분께 고성 송지호해수욕장에서 A(여·26)씨와 B(42)씨가 물에 빠졌다가 각각 심정지, 의식저하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50분께도 송지호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30대 남성 2명이 바다에 표류했다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송지호해수욕장은 지난 20일 폐장한 상태였다.

삼척과 화천에서도 수난사고가 속출했다. 27일 오전 10시께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오십천 계곡에서 C(32)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소방 당국에 따르면 C씨는 전날 오후 4시38분께 오십천 잠수교 인근에서 일행 7명과 물놀이를 하던 중 실종됐다.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삼일계곡에서도 26일 오후 1시5분께 30대 여성 D씨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27일 오전 9시19분께 인제군 기린면 북리의 한 도로에서 E(36)씨가 몰던 자전거와 마을버스가 충돌했다. E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26일 오전 11시7분께 양구군 양구

읍 수인리의 한 도로에서도 F(46)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1톤 포터트럭이 충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트럭 운전자 G(36)씨도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오전 6시12분께 홍천군 동면 속초리의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니로 SUV에 H(여·69)씨가 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다.

화재도 있었다. 26일 오전 7시44분께 영월군 영월읍 팔파리에 위치한 영월교도소 오수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 33㎡를 태우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김준겸기자 lean@

2023 08 28 ()

04

강원도민일보

도내 14개 시·군 분만 취약지... 10개 지역 산후조리원 전무

☞ 무너지는 강원도 공공의료

⑥ 아이 낳기 힘든 강원도

평창·정선·인제 등 군 단위 심각

분만 산부인과 설치 등 대책 필요

도 “장비·운영비 지원 시행 중”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도전이고 모험이다.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14개 곳이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분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10개 시·군에는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돼 도내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아이를 출산한 김모(32·횡성) 씨는 정기검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모두 원주에서 해야 했다. 횡성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이다. 집에서 원주시에 위치한 병원까지 차로 30분 이상 걸리는 탓에 남편과 시간을 맞춰야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남편이 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해

도내 분만취약지 지역별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평창, 정선, 인제, 화천	고성, 양양, 횡성	삼척, 속초, 양구, 영월, 철원, 태백, 홍천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

김 씨는 “임신기간 내내 언제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쟁야야 할 집도 많은데 병원이 멀다보니 불편한 게 너무 많았다”며 “그래도 원주가 가까워서다 행이 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면 혼자서 다니는 건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는 군 단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창, 정선, 인제, 화천 등 4곳이 보건복지부 지정 A등급 분만취약지로 분류돼 있다. 60분 내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이 30% 이상이고 60분 내 이동 가능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률이 30% 미만인 것을 동시에 충족하는 셈이다.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는 B등급 분만취약지도 고성, 양양, 횡성 등 3곳이고 잠재적으로 추후 분만취약지

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 C등급 분만취약지는 삼척, 속초, 양구, 영월, 철원, 태백, 홍천 등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 동해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분만 취약지로 지정돼 있는 실정이다.

출산 이후 산후조리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내 산후조리원은 총 17곳이다. 대부분 춘천, 원주, 강릉에 몰려 있다. 동해, 삼척, 철원, 화천, 양구 등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개 시·군에는 아예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태다.

황준원 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분만취약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송 수단 보급, 수가 및 시설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내 곳곳에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장비와 운영비 등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2023 08 28 ()

02

강원도민일보

“개발진흥지구 해제돼도 기존 지구단위계획 규제 유지”

양양군 난개발 우려 적극 반박

해제시 용도계획 자체 변경 가능

도 “해제안 법적 절차 모두 준수”

도시계획심의위 승인 여부 결정

양양군은 현남면 남애리를 포함한 11곳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등을 담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섰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양양군은 중점규제 해소를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남애리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포함한 지역내 개발진흥지구

11곳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진흥지구는 관련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거기능 등 개발이나 정비에 필요한 지역을 지구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용도지역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적용된다.

양양군은 이미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2011년에는 변경계획 결정 고시까지 마쳤다. 군은 지구계획을 마무리함에 따라 중점규제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진흥지구 해제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주

거형’으로 고시된 남애지구 등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적용, 단독주택 3층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층 이하로 기존의 규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군은 이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시 유흥시설이 난립하는 등 난개발로 인한 해양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근거없는 비난이 계속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양양군 관계자는 “각 개발진흥지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는 상업·주거시설 등 지구내 용도계획별로 용적률·건폐율의 체계적

인 관리가 이뤄진다는 의미”라며 “일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애리 일대의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해 최대 4층으로 건물높이가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해 용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개발진흥지구내 용도계획 변경은 광역단체인 강원도의 승인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용도계획 수립 및 변경은 시·군위임 사항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기존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는 도로와 공원 등 용도계획을 바꿀 때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며 “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면 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할 수 있어 주민 민원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소관 부처 및 각 실·국별 심의를 거쳐 양양군이 추진하는 개발진흥지구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양양군은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해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담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 강원도에 제출했다”며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8 28 ()
/ 19

교육공무직 정원 초과 페널티 신중을

-교사 잡무 경감 위해 권장했던 정책, 대안 찾아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 공무직 현원이 정원보다 많아 매년 교육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는 교육부를 통해 지원받지만, 페널티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스스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은 공무직 증원 당시 정부는 교원 잡무를 경감하기 위해 채용을 권장했는데, 이제 와서 페널티를 주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증원으로 인한 예산지출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 따라 정책이 급격하게 변하면 교육행정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단계적인 인원 감축 정책이 아닌 페널티를 통한 예산 절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도교육청 교육 공무직 정원은 5439명입니다. 반면 현원은 7941명으로 2502명 더 많습니다. 지난 2017년 6871명이던 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숫자는 2018년 7976명으로 1105명 늘어난 뒤 매년 증가, 지난 2020년 8133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정원이 5650명에서 5439명으로 더 크게 줄어, 정·현원 간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인원 줄이기에 나섰지만, 공무직

의 고용은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이들을 임의로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퇴직한 인원의 후임을 채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를 좁히려는 정부의 접근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승인해 준 정원에 비해 도교육청이 고용한 공무직이 과원을 기록하면서 2020년부터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0억3389만원이던 페널티는 지난해 10억9206만원을 기록한 뒤 올해는 11억4523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인건비에 대한 도교육청 예산이 늘어나면, 지역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교육계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필요성에 의해 특정 사업을 전담하던 공무직이 사라지면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원 조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인원이 많다고 페널티를 주는 정책은 교육계의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08 28 ()

/ 19

올 하반기·내년 경제 불투명, 이대로 관망은가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인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올 2월부터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2월 2.4%에서 5월 2.3%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내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4%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엔 경기가 반등하며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접어야 할 판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1%대로 내린 전망치까지 내놨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 것에도 이러한 고민이 담겼다. 국내외 불확실성을 의식한 고육지책이다.

가계 부채가 늘고 환율이 오르는 등 금리를 인상해야 할 요인은 많다. 그러나 기대했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오히려 부동산발 리스크로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내 물가와 경기 흐름을 고려해도 이해할 만한 한은의 결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엔 2.3%까지 내려왔다.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할 수준은 아니다. 경기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커졌지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수출과 수입, 투자·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 하방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 당장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더 부실해질 수 있다.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시장도 어려워진다. 또 고용이 얼어붙으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소비시장도 침체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내수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가구 실질소득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상태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 떨어졌다. 반면 고물가 영향으로 가계 지출은 4.1%나 증가했다. 소득은 감소했는데

지출은 늘었으니 사는 게 팍팍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 하반기와 내년 경제다. 올해 1%대에 이어 내년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올 해보다 더 나이지지 않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3.50% 동결
경제성장률 올해 1.4%, 내년 2.2% 전망
저성장 극복할 경기 회복 대책 마련 시급

을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다. 침체가 우려되는 경기를 회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이기는 커녕 2년 연속 1%대 성장률로 추락하며 저성장의 늪에 갇힐 수 있다. 규제 혁파와 초격차 기술 확보, 노동·교육 등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해 충격을 최소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대 중국 교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또 금융 당국은 외환시장 불안, 가계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해 선제 대비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8 28 ()

/ 19

산업단지 규제 혁파,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 돼야

앞으로 노후 산업단지(산단) 내 편의점, 공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업종 규제로 산단 입주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이나 서비스 업종도 심사를 통해 산단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즉, 그간 산단은 조성 때부터 설정된 입주 업종 제한으로 많은 업체가 입주를 희망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자체나 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이 산단 준공 10년부터 5년마다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산단 입주 당시엔 A업종 입주가 어려웠지만, 이후 산업·기술 환경이 변화했다면 관리기관의 검토를 통해 A업종의 추후 산단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업종 분류가 불명확한 신산업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해 업종, 산단 입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늘어나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시설' '제도' '인력'이 모두 노후화된 산단을 대대적으로 개조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지난 24일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 개선을 담은 '산업단지 3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윤

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지역의 노후 산단이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기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산업단지 3대 킬러 규제 혁파'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강원자치도는 국가산단 1곳, 일반산단 17곳, 도시첨단산단 4곳, 농공단지 44곳 등 모두 66곳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반산단 4곳과 농공산단 15곳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돼 당장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파악,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간 산단 내 대부분 용지는 산업시설로 지정돼 편의점, 약국, 공원 등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청년 근로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토지 용도 제한을 풀어 노후 산단에 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강원자치도는 노후 산단의 시설도 대폭 개선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담아낼지 고민해야 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8 28 ()
/ 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할 때 아니다

-코로나때보다더 어렵다는불황 호소반영해야

코로나19대유행 시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영세한 업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와 도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는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 악영향으로 경영 여건은 코로나 때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추진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언급한 사실이 최근(8월 25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을 폭넓게 주무 부처와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환수 대상은 방역지원금을 제외한 4종의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연차보고서'에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재난지원금 현황을 보면 새희망자금은 251만명에 2조8000억원이고, 버팀목자금은 301만명에 4조3000억원입니다. 2020년 9월 24일 새희망자금 첫 지급 당시 소상공인 매출은 이전 4주 81.8%에서 이후 4주에 86.4%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021년 1월 새희망자금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급 속도가 최고평가를 받아 신속성 기대에 충족했음을 자랑했습니다. 새희망자금에 대한 희망, 해결, 도움, 감사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인식은 88%에 달했다는 호평이 게재되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 단계별 방역조치에 따른 업계 지원 차원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가구 총소득이 하락하는 등 경제적 충격이 따랐고 소비 감소 여파는 시중경제로 직결됐기에 사회복지 성격을 띠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재난에 더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한 정부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는 향후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의 정부 신뢰성 및 지급 필요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 못지않은 경제불황이라는 호소가 나오므로 더 신중해야 합니다.